

# 도청 이전·약대 유치 등 소모적 경쟁...지역발전 걸림돌로

### 전남 동·서부권 현안마다 갈등...정치권도 소지역주의 편승 부추겨 전국 최고 의료 취약지 전남, 통합 의대안 마련 30년 숙원 풀어야

전남 동·서부권은 '동부권 편애', '서부권 홀대론' 등으로 나누어 주요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끊임 없이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동·서부권으로 갈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단일화된 힘을 실어주기 어렵다. 소지역주의에 편승해 지역 간 경쟁·갈등 구도를 오히려 강화시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남 국립 의대 입지를 놓고 벌어진 갈등도 이 같은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목포·순천대 간 통합 합의로 지역 갈등을 풀어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도청 이전부터 약대 유치, SOC 확보전, 국립 의대까지 동·서부권으로 나누어 끊이지 않았던 지역 간 갈등은 도청 이전도 빼놓을 수 없다. 전남도가 도청 무안 이전에 따라 빛이날 수 있는 동부권 행정 편의를 위해 순천에 동부지역본부 마련했지만, 동부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동부지역본부의 기능과 인력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도청 이전에 따른 걸맞은 행정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서부권도 이에 반발, 전남도의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근 동·서부권 간 갈등 구조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목포·순천대가 지난 2010년 정원 25명씩 약대 인가를 받고 이듬해 5명의 인원을 추가로 배정받는 과정에서 빛이날 유치전도 치열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보도 빼놓을 수 없다. SOC 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지역균형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여수세계박람회(2012년)·순천만정원박람회(2013)·여수세계한상대회(2019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3년)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굵직굵직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관광시설 등을 확충하면서 동부권은 '폭풍' 성장을 했다.

여수박람회장 건립에만 2조1000억원이 들어갔고 인근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에 18조원이 투입됐다. 몇 년, 몇 십 년 간 절금 지원을 받으며

SOC를 확보해온 서부권과는 대비될 수밖에 없다. 국내 최대의 여수석유화학 산단을 중심으로 밀집한 대기업 사업장들,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을 중심으로 철강 산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 발전도 서부권에서는 제대로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면서 서부권 홀대론을 부추겼다.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광주·영암·목포·아우토반, '목포 구도심-하당-무안 남악-오룡'(총연장 15.7km) 구간을 잇는 전남형 트램,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목포신항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제시한 것도 서부권 지역민들의 서운한 민심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 의대 유치전도 이같은 지역 경쟁 구도 속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역 정치인들부터 동·서부권으로 갈린 유치 목소리를 단일화하는 데 앞장서기는 커녕, 순천과 목포에서 유치 토론회를 열며 지역 간 경쟁·갈등 구도를 강화시켰고 목포·순천대도 저마다의 입장만 내세우며 소모적 논쟁을 이끌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통 큰 결정에 힘 실어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국립 의대 유치와 동·서부권의 공동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끌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 실태는 통계로도 확인된 상태다. 전남은 노인 인구비율 전국 1위(10월 말 기준 27.0%)로, 도내 276개 유인도 중 의사가 없는 섬이 164개에 이른다. 게다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군이 의료 취약지인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도 전남은 9.7%로, 전국 평균(4.7%)을 훌쩍 넘는다.

국립 의대는 전남이 지난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신설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숙원 사업.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수요에도, 상급 병원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 '원정 수술길'에 올라야 하는 현실을 들어 국립 의대 유치의 필요성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장흥군민과 함께하는 정책비전 투어 장흥군민과 함께하는 정책비전 투어 장흥군민과 함께하는 정책비전 투어를 진행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실·국 정책회의에서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확실히 담보하면서 대학 미래 발전을 위해 15일까지 통합에 합의해줄 것을 호소했다.

을 30년 넘게 호소해왔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공식화한데다, 답보 상태에 있는 여·아·정 협의회가 첫 회의를 통해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열악한 지역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을 갖고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을 통한 단일 의대 안을 마련, 유치를 위해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순천대 총장께서는 대학 통합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협의를 잘 이끌어왔다"면서 "도민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통 큰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13세 이상 국민 25% "대한민국 안전하지 않아"

### "안전하다" 비중 33→29%

### 2014년 이후 첫 하락 전환

만 13세 이상 국민 넷 중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와 경제적 위기를 꼽은 비중이 2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세 이상 국민 중에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답한 비중은 28.9%로 2년 전(33.3%)보다 4.4%포인트(p) 하락했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답한 비중은 2014년 9.5%를 기록한 뒤로 2년 주기로 이뤄진 조사에서 매년 상승했지만 지난해 처음 하락세로 전환했다.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1.7%에서 25.6%로 상승했다. 주로 범죄·교통사고 등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57.6%), 정보 보안(42.2%) 등에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가 1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3.3%에서 4.6%p 상승한 것이다. 경제적 위험도 같은 기간 3.2%p 상승한 16.5%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많았다.

2022년 조사 당시에는 팬데믹 여파로 신종 질병

(21.0%)이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5년 전과 비교해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답한 비중은 21.9%로 2년 전보다 10.4%p 감소했다.

환경 문제 중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부문은 미세먼지(67.4%)가 가장 많았고 기후변화(53.2%), 방사능(47.5%) 등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 대상 기간 2주일간 유병률(질병·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비중)은 29.0%로 2년 전보다 2.5%p 상승했다.

다만 아팠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 유병 일수는 9.6일로 2년 전과 같았다.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38.4%로 2년 전보다 6.5%p 하락했다.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은 직장생활(62.1%)이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35.7%), 가정생활(34.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비중은 4.8%로 2년 전보다 0.9%p 하락했다. 자살 총동 이유는 질환·우울감·장애(37.2%), 경제적 어려움(25.8%), 직장 문제(11.2%), 외로움(9.0%), 가정불화(8.0%) 등 순이었다.

평소 안에 걸릴까 봐 두렵다고 답한 비중은 36.3%로 2년 전보다 0.8%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약 1만9000개 표본 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 尹 "불법 채권추심은 악질 범죄...검·경 수사역량 총동원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례회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 씨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9월 전북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지시한

불법 채권 추심 단속에 대해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금융을 조사해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 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된 양극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반기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라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

원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달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노쇼(No Show-예약 부도)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계기로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북구의회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